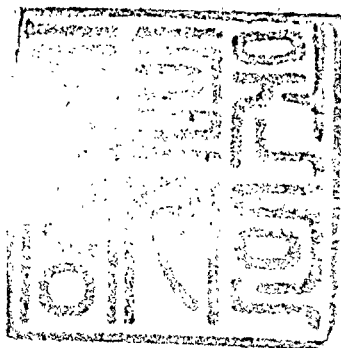


20

통 일 충 시

獨逸統一의 過程과 教訓

朴 聖 祚(베를린自由大 正教授)



통일연수원

차 례

1. 序 言	3
2. 獨逸統一의 意味	7
3. 獨逸統一의 促進要素	9
4. 獨逸統一의 實現過程	15
가. 政治的 次元	16
나. 經濟的 次元	28
다. 社會的 次元	57
라. 文化 및 民族意識的 次元	64
마. 教育 및 研究的 次元	72
5. 韓半島 統一에 주는 示唆點	84
〈부록〉	
동서독 통일과정 일지	91

1. 序 言

남북한 통일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뒤늦은 統一作業이 되었다. 통일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온 독일은 그렇게도 빨리 통일이 되었고 베트남, 예멘도 통일이 됐는가 하면 中國과 대만도 統一에 관한 構想을 論議하기 시작했다. 냉전해소와 통일작업이 現世界 歷史創造에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獨逸統一의 實現可能性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아 왔다. 어떤 사람들은 “독일통일은 절대 不可能하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채 一年도 되지 않아 독일은 統一됐다. 명실공히 20세기의 기적을 이루었고, 어떤 이는 ‘독일인의 걸작’이라고도 부른다. 이를 성취한 독일연방수상 헬무트 콜을 제 2의 비스마르크라고 칭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독일의 2차대전후 경제 재건을 상징하는 ‘라인강의 기적’이 羨望의 대상이 되어 왔고 우리 경제발전에 양으로, 음으로

많은 교훈이 되어 왔다. 그러면 이번 독일의 통일실현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선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獨逸의 政治的, 制度的 統一은 이루어졌으나, ‘두 독일민족’이 통합하는 課題는 아직 남아 있다. 後發者인 한국은 이러한 독일경험을 신중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스-자이델」재단의 사무국장인 게벨트 박사는 1991년 10월 9일 「독일통일 일년후」라는 모임에서 “한국은 지금 차분히 통일준비를 할 수 있는 행복한 民族이다. 獨逸統一은 너무나 급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족한 준비태으로 오늘의 진통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과연 ‘북한의 變革이 나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可能性을 감안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독일의 시행착오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事實인 ‘동독을 잘 분석·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통일준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北韓의 實情을 어느 정도 분석·파악하고 있는가? 또 이러한 분석위에서 통

일준비가 되고 있는가? 筆者가 재직하고 있는 베를린自由大學에는 유명한 東獨研究所, 東歐研究所가 있다. 그러나 東獨·東歐地域이 몰락하여 共產主義가 自由民主主義體制로, 社會主義가 市場經濟體制로 변혁하는데 아무런 처방도 내놓지 못했다.

현재 통일독일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진통은 ‘無知’에서 기인하는 것이 많다고 自他가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東獨研究者들, 東歐研究者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의 研究對象은 理念, 制度, 經濟實績 比較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共產圈研究는 冷戰的 立場에서 資本主義體制的 우월성을 表出하는데 급급했다. 더욱이 1960年代에 잠시 논의됐던 ‘체제수렴설’(Convergence Theory)이 자취를 감추고 난 이후 社會主義體制的 變革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아무런 研究業績을 볼 수 없었다. 한국의 北韓研究도 시종일관 冷戰的 立場을 固守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의 研究‘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共產圈研究 ‘틀’의 변화가 당연하다는 것은 공산권의 몰락 자체가 正當化시켜주고 있다. 自由民主主義가 共產主義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최근 소련, 동구의 경험에서 立證됐다. 따라서 北韓研究도 體制變革研究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결국 統一研究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意味에서 統一研究는 明白한 體制變革의 테두리를 만들어 目的論的 立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학문적인 統一研究는 불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는 政治經濟體制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체제변혁연구는 部分的(Partial)인 입장이 아니고, 總體的·體系的 接近으로서만 가능하다. 즉 체제변혁연구는 政治經濟變革의 궁극적 目的인 ‘自由 및 自律的人間(free and autonomous human-being)’의 실현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체제변혁은 인간변혁으로서만 가능한 이상 北韓研究 내지 統一研究도 總體的, 體系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獨逸統一의 意味

이상하게도 최근 南北韓 雙方은 ‘獨逸式 吸收統一’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독일통일이 民主主義的 憲法節次에 의하여 併合한 것을 “強大國이 弱小國을 植民主義式으로 흡수했다.”고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독국민의 民主主義的 決定을 완전히 沒理解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독일국민에게 실례되는 언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표면에 나타난 현실일지라도 독일통일은 어디까지나 ‘強制的 吸收統一’이 아니라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併合統一’이었다.

한국에서의 독일통일에 관한 또다른 曲解는 독일통일을 ‘物質的 觀點’에서만 보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독일통일을 보는 눈이 ‘統一費用’에 集中되고 있다. 독일통일에 관한 심층적 연구없이 다만 비용적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體制變革의 포괄적인 課題를 단순히 商品去來次元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는

우리경제의 未成熟性, 不安定性 등을 거론하면서 統一時期尙早論, 심지어는 統一無用論 운운하며 統一實現에 많은 부정적인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

동서독은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도 ‘統一’이라는 用語를 쓰지않고 오히려 ‘接近(Annäherung)’이라는 表現을 사용해 왔다. 兩體制가 接近하여 점차적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前提하고 이를 위한 決定的인 始發點을 빌리 브란트 前首相의 東方政策(Ostpolitik)에서 찾았다. 빌리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다름 아닌 냉전해소를 위한 接近政策(Annäherungspolitik)이었다. 결국 독일통일은 경제, 문화, 통신, 교통, 환경, 과학, 기술 등 모든 分野(政治分野는 제외됨.)를 접근가능한 分野, 나아가서는 協力이 가능한 分野로 선정하여 이러한 分野에서 兩獨이 수렴할 수 있었다는 것이 統一實現에 얼마나 重要했었던가를 보여준 것이다.

독일통일을 一般的으로 政治的, 制度的, 通貨 統一으로써 해석하나, 1990년 7월 1일의 經濟統合

은 單一市場 形成을 主目的으로 한 것이지 산업 구조조정은 未來의 과제로서 남겨진 것이었다. 또한 경제통합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회통합도 ‘全社會保障制度의 一元化’를 意味하는 것이었지, 동서독 주민들간의 一元화된 社會意識은 여기서 전혀 言及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독일에서 ‘統一’이라고 言及할 때는 우선 政治的, 制度的, 通貨, 市場一元化를 意味하는 것이며 經濟構造調整, 社會意識統合, 나아가서 文化的, 精神的 統一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3. 獨逸統一의 促進要素

독일통일의 實現을 促進한 要素를 단순히 ‘게르만民族의 特性’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文化主義的 接近이 팽배하고 있으나 現在 獨逸統一 實現過程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통을 분석해 볼 때 오히려 文化主義的 接近의 정반대현상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西

獨人이 東獨人을 ‘二等國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文化主義的 立場을 떠나 다음과 같이 서독자체내에서 機能主義的, 構造主義的인 促進要素를 찾아보는 것이 독일통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西獨은 독일의 政治史, 憲政史에서 처음으로 가장 능률적인 議會民主主義를 實現했다. 第一次大戰以後 독일에서 실현된 「바이마르」 民主主義는 定着도 되기 전에 國民의 낮은 정치문화 수준 때문에 히틀러獨裁體制로 옮겨 갔다. 第二次大戰 以後에 독일은 分斷되어 동독은 共產獨裁로 갔지만 서독은 점령국인 美·英·佛의 덕택으로 西歐議會民主主義를 도입, 積極的으로 實現해 왔다. 서독은 政治的 民主主義의 土臺인 基本權의 完全한 保障은 물론이고 議會民主主義의 根本要素인 與黨과 野黨間的 시한부 政權交替를 安定속에서 實行해 왔다.

② 서독의 産業民主主義는 그간 西歐國家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발전하고 성숙해 왔다. 二次大戰以後 서독은 점령국의 덕택(사실은 壓力에

의하여)으로 西歐에서 가장 진보적인 共同決定權制度(Montan-Mitbestimmung)를 철강·석탄산업에 導入해서 實施했으며, 이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좌경화될 수 있는 노조와 노동자를 포용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이와 보조를 맞추어 西獨은 모범적인 社會保障制度를 구축했다. 물론 社會保障制度는 成長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기 때문에 成長없이는 社會保障制度도 없다는 인식위에서, 우선 ‘成長’, 다음은 ‘社會保障制’라는 順序로 추진함으로써 自由市場經濟體制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서는 社會主義에로의 傾向性을 견제할 수 있었다.

③ 西獨은 1950년대 초부터 無制限 放置된 自由市場經濟體制를 추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社會的 倫理와 責任을 갖는 企業間的 公正한 경쟁을 前提로 하여, 만약 公正競爭行爲에 위배되어 競爭秩序가 不調和狀態로 갔을 때에는 國家가 干涉하여 다시 원활한 公正去來를 可能케 하는 이른바 社會的 市場經濟(Sozial Marktwirtschaft)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中

小企業育成促進政策을 추구하고, 廣範하고 分散된 中産層育成政策(Mittelstandspolitik)을 실시함으로써 독일경제는 건전한 구조에서의 成長과 社會平等을 實現하는 社會安定의 基礎를 닦았다. 이와 같은 要素는 결과적으로 西獨의 經濟生産性을 高度化시켰으며 서독을 명실공히 세계 제1의 무역국으로 부상시켰다.

④ 독일통일에 관해 國民全部, 모든 社會團體間에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다. ‘통일’보다 ‘접근’이라는 用語自體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접촉을 反對하고 끊임없는 努力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冷戰中에서, 또한 二次大戰을 일으키고 敗戰한 독일이 統一이라는 政策을 追求한다는 것이 非現實的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데 그 배경이 있다. 그러나 西獨基本法에 제2차 세계대전 전의 獨逸領土에 살고 있는 居民이 國民投票에 의하여 독일연방에 併合(Beitritt)될 수 있는 餘地를 둘 수 있었던 先見之明이 양독간의 부단한 接近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東·西獨間의 接近은 政府, 政

黨, 社會 어느 기관에게도 政治的 道具로써 利用 되거나 惡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統一政策은 政府의 專有物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모든 社會組織, 機關이 주어진 與件속에서 東獨이라는 相對方을 찾아 接近하는데 物質的·精神的 支援을 해 주었다.

이와 같이 동서독간의 國民과 國民, 團體와 團體間的 접촉 이외에도 東獨人은 서독방송과 텔레비전을 통해 西獨事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東獨人이 보는 西獨은 ‘政治的 自由가 있는 곳, 物質文明이 발달한 곳’으로 압축되었다.

이것이 東獨人으로 하여금 西獨으로 피난 내지 이주하게 만든 가장 큰 動機였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독일이 1990년 10월 3일 統一되기 전에 이미 ‘매스콤통일’이 이루어졌다고도 한다.

⑤ 독일통일은 容易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韓半島統一이 오히려 쉽게 實現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빈번히 들어 왔다. 점령국들은 독일이 第一·二次世界大戰의 責任者로서 永久히 分斷國으로 存續될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의혹과, 거리감을 갖고 있던 점령국들과 주변국가들이 쉽게 獨逸統一 實現에 贊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西獨外交의 成功이라고 볼 수 있다. 西獨은 二次大戰後 아데나워 수상에 의하여 西歐國家(프랑스, 영국 및 주변국들)들과 철저한 友好關係를 구축했다. 西獨은 西歐民主主義에 뿌리를 박고 겸손하고 신뢰있는 파트너로써, 政治的·軍事的 野望이 없는 국가로서 행동했다.

이것이 서독이 戰後 시행한 아데나워의 西方統合政策(Westintegration)이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統一實現에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이 때문에 어떤 이는 독일통일은 美國이 해주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러한 西方政策에 의한 서독과 서구국가의 友好關係는 브란트에 의해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東方政策의 뒷받침이 됐다. 그러나 東方政策은 直接的인 統一政策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東歐·東獨과 接近하여 冷戰을 解消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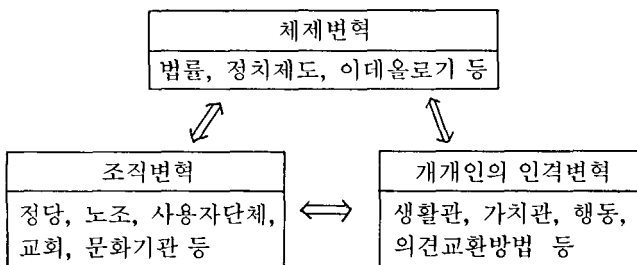
이같은 不斷한 냉전해소정책이 결국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여기서 統一政策의 ‘不斷性’이라는 말은 독일에서 與·野黨間의 政權交替가 있었을 때도 항상 근본적 통일노선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4. 獨逸統一의 實現過程

‘統一陣痛’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흥미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이 용어대신 ‘體制變革의 어려움’이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한국에서 統一陣痛이라고 했을 때, 一般的으로 ‘統一費用’을 중심으로 말하고 또 일부에서는 東·西獨人間의 의견교환이 대단히 어렵고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統一의 意味를 확대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統一의 진통을 論할 때 筆者는 다음과 같은 分析的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體制變革을 조직변화, 개개인의 인간변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관성을 감안할 때 독일의 통일진통은 다음과 같은 5가지 次元에서 검토할 수 있다.

- ① 政治的 次元
- ② 經濟的 次元
- ③ 社會的 次元
- ④ 文化 및 民族意識的 次元
- ⑤ 教育 및 研究的 次元

가. 政治的 次元

筆者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난 후 東獨人學

者들의 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빈번하게 가졌다. 그때 받은 인상은 東獨人의 웅변기교가 뛰어나고, 완벽한 民主主義用語를 구사하며, 회의진행방법이 너무나 규칙적이라는 점이였다.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이 짧은 시일내 民主主義的 회의방식과 용어를 터득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곧바로 東獨人이 民主主義를 내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지 앵무새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독일은 民主主義施行에 있어서 다른 先進國과 比較할 때 짧은 歷史를 갖고 있다. 「바이마르」時代의 10여년의 歷史는 히틀러獨裁로 이어졌고 二次大戰後 독일은 兩分되어 西獨만이 40여년간 民主主義를 시행해 왔다. 이것은 독일 民主主義 歷史에서 가장 긴 歲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治家와 政治學者들은 독일(西獨)에 과연 政治文化가 뿌리박혀 있는지에 대해 의아심을 가질때가 많다. 東獨의 경우에는 二次大戰後 히틀러獨裁에서 바로 共產體制로 옮겨 갔다. 히틀러의 등장을 1930년으로 본다면 동

독은 1990년까지 60년간 독재속에서 살아온 것이 된다. 그러므로 東獨人は 西歐의 自由民主主義를 全然 모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생활해 온 東獨人이 西獨에서부터 수입되어 온 自由民主主義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과제가 될 수 없다.

동독의 장벽이 무너지자 그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것이 정당, 정치·사회단체였다. 그러나 東獨에서 反獨裁運動·民主主義運動을 지하에서 해 온 宗教人, 文化人, 學者들의 모임은 산발적이고 정치적 의욕도 갖지 않았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東獨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공산당과 공산정권하에서 용납됐고 그들과 동조했던 정당들이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西獨政黨들은 東獨에서 자매정당들을 만들기에 분주했다. 그 결과 이러한 政黨形成過程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들이 그 이후 점차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東獨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지도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었다.

크리스타 블프가 경고했던 동독의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동독의 정치인, 정당지도자들이었다. 즉, 많은 東獨政治指導者들이 ‘과거청산’이라는 것을 忘却한 채 ‘新政治人’으로 등장했으나 그들은 共產政權에 同調했던 者들로서 특히 「國家安全機構」(Stasi)의 ‘일꾼’으로 활동했던 자들이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국회선거를 며칠 앞두고 자진사퇴한 사민당 당수 뵘메, 자유민주당(서독기민당과 가까움.) 당수 슈누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슈타지」에 동조한 과거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던 前동독 기민당 당수이며, 동독정부 수상이었던 드·메이에르도 결국 政治生命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氷山の一角일 뿐이다.

그리고 現在 獨逸政治에서 가장 큰 진통은 東獨에서의 과거청산 즉, 西獨에서 二次大戰後 나치에 동조한 사람에 대한 과거청산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試行錯誤를 東獨에서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놓여 있다. 法治國家의 根本原

則에 따라 증거없는 형벌을 생각할 수 없으나, 많은 서류와 증거물이 統一直前に 없어서 증거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생활속에서 現在論議되고 있는 과거청산에 대한 3가지 立場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킹켈 法務長官의 立場이다. 독일이 法治國家인 以上 반드시 合法的 節次에 의한 과거청산만이 可能하기 때문에 만약 증거서류 취득이 계속 어려울 경우 ‘大赦免’도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스톨페 브란덴부르크州 수상의 입장이다. 그는 政治中立的인 宗教人·文化人·學者들로 구성된 「과거청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셋째, 쇼올래머 목사의 입장이다. 그는 「총국민정신재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는 人民裁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어떠한 方向으로 논의가 進展될 것인지 正確히 알 수 없으나 킹켈 法務長官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이미 유효한 상황

이다. 그러나 이 절차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60%이상의 독일인은 종전 공산당 당원 혹은 공산정권 동조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구동독공산당원 또는 공산정권 동조자가 현재까지도 정치 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서독인 견해	동독인 견해
괜찮다	8%	10%
안된다	65%	60%
무관하다	25%	27%

이 표에서 보면 동독인은 서독인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설문에서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즉, 동독인이 과거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현직에서 물러날 때 서독인으로 代替되는 것이 좋느냐? 라는 질문에 동독인의 48%가 다시

퇴직한 동독인 자리를 서독인이 맡아도 좋은가?

	서독인 견해	동독인 견해
옳다	47%	29%
다시 동독인을 기 용해야 한다	25%	48%
무관하다	28%	21%

동독인을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국 동독인들은 과거청산에 대하여 서독인보다 덜 민감하다는 얘기가 된다.

예를 들면 종전 東獨首相이었던 호네커와 그의 後繼者인 크렌츠, 모드로, 그리고 밋탁, 볼프 등과 같은 최고정치가들에 대한 과거청산은 전혀 되지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크렌츠는 西獨 會社의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고 모드로는 다시 공산당(PDS) 국회의원으로 등장해서 저술활동까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社會主義에 관한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 과거 東獨政治家들 중에는 과거 청산보다도 개인적인 자본·재산축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大部分이다.

최근 들어 舊東獨 Stasi文書を 責任맡고 있는 가우크는 〈이 사람이야말로 구동독 政治人에 관해서 그간 많은 조사를 한 사람이다.〉 앞에서 설명한 「총국민정신재판」을 주장했다가 基民黨과 基社黨의 정면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하튼 과거 동독지역의 州政府閣僚(예를 들면 작센·안할트州, 드레스덴州)가 「슈타지」와 대단히 密接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最近에는 작센州議會에 적어도 15명의 議員이 역시 같은 혐의를 받아 사퇴하는 形便이 됐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결국 政府次元에서 보는 立場과 ‘인민재판’ 또는 ‘총국민정신재판’의 두가지 흐름에서 계속 論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舊東獨地方에서 自由民主主義화된 政治家나 行政家, 政策家は 누구인가? 구동독시절 地下에서 反共產運動을 한 少數의 宗教人, 文藝人, 學者들을 들 수 있으나 〈물론 그들의 일부가 政治家로서 등장했다.〉 그들은 사실상 民主主義運營方法을 습득하고 體驗해 본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연령상으로도 바이마르民主主義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舊東獨의 民主主義 構築 作業과 山積한 行政決定業務를 맡기겠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즉, 東獨이 西獨과 같이 民主主義를 운영 하려면 우선 이를 운영하고 국민의식속에 民主主義를 심어 갈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者라 야만 可能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舊東獨地方 各聯邦州의 州知事(드래스덴州는 西獨出身이 州知事이고, 東베를린은 西베를린과 합쳐짐에 따라 西베를린市長이 동베를린까지 관할하게 됐다.)는 東獨出身이지만 그곳 각료들의 大部分은 西獨出身들로 임명됐다. 특히 法務, 經濟, 財務, 敎育擔當은 전적으로 西獨出身에게 맡기고 있다.(이러한 사람들을 西獨에서 온 수입품(West-Import)이라고 한다.)

이같은 각료구성에 있어 가장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곳이 드래스덴州로서 서독출신인 州知事は 舊東獨地方에서 ‘획기적 改善’이 없다면 完全한 統一은 不可能하다는 哲學을 表明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드레스덴州는 과거청산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고급관리, 대학교수(총장 포함), 교사 등 國家公務員 중에서 만약 사상과 과거행적이 Stasi나 共產黨과 가까웠던 것이 드러나는 사람은 긴급해고조치를 당하고 있다.

구 동독지역에서 교육분야는 全般的으로(幼稚園부터 大學 및 大學以外的 各研究所까지) 改善하는 作業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서는 경제부서이다. 이 方面에 대해서는 東獨人들은 거의 無경험·無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경제부서는 반드시 西獨出身이 각료직을 맡고 次官級에 東獨人을 쓰고 있다. 경제부서 다음으로 중요한 부서는 법무행정부서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각료나 고위자의 정책결정에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 一般行政에 있어서도 舊東獨出身은 全部 새로 배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西獨의 各연방주는 자매주를 선정

하여(예를 들면 서독지역의 노르드라인·베스트 파렌州의 자매주는 브란덴부르크州이다.) 西獨의 행정관리가 파견되어 행정기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는 지금 西獨人에게 주어진 義務로서 연간 최소한 6週以上 동독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한때는 政府에서 強制로 서독관리를 東獨으로 파견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많은 反對輿論이 있어, 위와 같은 일시파견 또는 신규로 채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통일진통을 정치적 차원에서 논할 때 政治文化에 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現在 독일에서는 外國人排斥(Fremdenhaß)運動이 강하게 번지고 있다. 數個月 前에 한 外國人이 드레스덴에서 극우단체들에게 사살당하고 數週 前에는 같은 州의 조그만한 도시 호이스베르더에서 極右集團 사람들이 그곳에 임시 收容되어 있는 亡命申請中인 外國人들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東獨만의 문제가 아니고 西獨에까지 波及되어 독일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은 외국사람에 대한 증오에

서 통일됐다.”(Vereint im Fremdenhaβ)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原因은 무엇일까?

물론 독일이나 서구사회내에서 잠재적으로 極右勢力이 존재해 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종전에 통용되어 온 ‘노동자는 좌측’, ‘부르주아는 우측’이 거꾸로 바뀌어, 독일을 위시해서 西歐一般에서는 노동자들이 보수경향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東獨에서 특히 보수·극우·국수세력이 강한 理由는 동독인의 政治文化속에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東獨人은 지난 40여년간 政治적으로 통제됐을 뿐만 아니라 個個人的 感情處理에 있어서도 강력히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意見이나 감정이 정제된 채 권위주의적으로 굳어져 왔다.

그리고 統一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이 職場을 잃고, 젊은層은 취직하기 困難하게 됐는가 하면 東獨(물론 獨逸全域에서도 그러하다.)의 住宅事情은 아주 어려운 狀態에 빠져 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最近에 各국에서 亡命申請을 해 오

는 外國人들을 우선적으로 수용소에 넣게 되고, 舊東獨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外國人이나 能力있는 外國人들이 우선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外國인은 독일에서 特惠待遇를 받아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追放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舊東獨에서 동독주민들은 대부분 外國人과 接觸한 적이 없기 때문에, 外國人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종전 소련인이 強制的으로 東獨에 와서 모든 특혜와 편의를 누렸던 것과 同一視하게 된다는 사실이 反外國人감정의 중요한 原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獨逸社會는 물론 西歐社會를 緊張狀態로 몰아넣고 있으나 政府側에서는 아무런 代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 經濟的 次元

東獨은 공산권에서 가장 경제력이 強하다고 < 소련 경제만 제외한다면 > 自他가 공인해 왔다. 국민소득수준도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였고 사회

간접자본, 기술수준(생산기술), 교육제도, 인력, 경영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없어져 東獨의 실상이 점차 알려지게 되고, 더욱이 開放以後 쇠도하는 東獨人들의 西獨移住를 통해 東獨의 경제생활수준이 西獨과는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폭로됐다.

물론 東獨經濟가 사회주의체제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었으나 구체적으로 東獨經濟가 어떻게 機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研究되어 있지 않았다.

東獨經濟의 특징을 든다면, 東獨經濟는 다른 共產主義經濟와 같이 國際經濟로부터 거의 격리되어 폐쇄경제를 固守하여 왔기 때문에 國際市場競爭에서 完全히 탈락되어 있었고, 다만 동구공산권내의 國家끼리만 경제교류를 해왔다. 따라서 商品의 질·가격수준, 나가서는 기술수준의 발전에 관한 知識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동독경제가 사회주의 경제권에서는 절대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으나,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7월 통화·경제통합이 실시된 이후 동독경제가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파산’과 ‘실업’이 동독경제붕괴의 상징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면 동독경제붕괴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각 연구소·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세가지 理由를 들 수 있다.

- ① 자원배분의 왜곡
- ② 노동자·경영자의 능력과 의욕의 저조
- ③ 대기업 위주의 비탄력성

일반적으로 동독전문가들은 동독의 국제경쟁력이 1980년대 들어와서 약 50%정도 떨어졌으며, 그 理由는 지난 30년 동안 강화해 온 「콤비나트」(연합기업)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콤비나트」가 동독의 경제를 物資面에서는 물론 研究開發(R&D)面에서도 지배했던 것이다.

다음 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비교적 다양하고 분화된 산업구조를 가졌던 동독은 1980년대 말에 가서는 完全히 ‘자

을적 「콤비나트」 경제체제(Autarke Kombinatwirtschaft)'로 옮겨갔다.

동독경제의 「콤비나트」 구조(1989년도)

	중앙정부관할	지역관할
제조업	126	95
건설업	21	31
교통/운수	3	17
농업, 임업, 식량	15	69
기타	8	17

제조업 분야의 경우 1970년에 불과 35개에 불과하던 중앙정부관할의 「콤비나트」는 1989년에는 126개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많은 관련 공장이 그 속으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95개에 달하는 지역관할 「콤비나트」에도 약 1,000개의 기업체가 흡수되었다.

1981년도에 산업 「콤비나트」의 生産集中度는 거의 100%였고, 98%의 종업원이 「콤비나트」에 취업되어 있었으며, 國民經濟의 80%가 「콤비나트」에서 산출되었다.

동독학자 한스-요하임 바이엘 교수는 「콤비나트」가 발생하게 된 근본동기는 한 기업체 내에서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밀접히 연결시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동기는 동독경제전체를 중앙집권적 입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될수록 적은 경제단위로서 편성하려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콤비나트」에 판매능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가 영업, 투자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에 2중적 지배형태(중앙부서-콤비나트)를 도입하여 상명하달식 명령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동독공산당 중앙위원회 경제서기는 126개 「콤비나트」의 총 지배인과 상의하여 全産業을 명령적으로 조정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경제체제 실현은 불가능했다. 탄력성, 소비자 기호, 품질개선에 관한 욕구가 증대했으나 중앙집권적 명령체제로서는 이에 부응할 수가 없었다. 결국 「콤비나트」 자체는 자급자족에 급급하게 되었으며, 자립적인 중소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국민경제발전에 얼마나

역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콤비나트」의 생산액은 연 40억 내지 100억 동독마르크 정도였으며 「콤비나트」의 반 이상이 연 20억 동독마르크 이상을 생산했다.

종업원 수가 많은 「콤비나트」는 4만 내지 6만 명 정도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외 대부분은 1-2만 정도였으며 지역관리하에 있는 「콤비나트」에는 약 5천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었다. (다음표 참조)

「콤비나트」 종업원수(1988년)

종업원 수	중앙 관리하		지역 관리하	
	공장수	%	공장수	%
500명이하	-	-	1	1
500~ 1,000명	-	-	17	14
1,000~ 5,000명	15	10	94	75
5,000~10,000명	36	24	10	8
10,000~30,000명	70	48	2	2
30,000~50,000명	18	12	-	-
50,000명 이상	9	6	-	-
합 계	148	100	124	100

하나의 「콤비나트」는 평균 20~40개의 공장과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특히 제조업 계통의 「콤비나트」는 60개의 공장 내지 회사를 갖고 있었으며, 이 회사·공장들의 평균 종업원수는 850-1,500명 정도였다.

「콤비나트」조직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垂直的·水平的 생산통합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수평적 성격은 예를 들면 케이블, 타이어 제조계통의 업체를 하나의 「콤비나트」에 소속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를 통하여 「콤비나트」의 독점성

「콤비나트」 소속의 기업체/회사수(1988년)

「콤비나트」 소속 기업수	중앙 관리하		지역 관리하	
	공장수	%	공장수	%
1	3	2	42	34
1 ~ 5	25	17	21	17
5 ~10	31	21	25	20
10~30	80	54	35	28
30~40	6	4	1	1
40~50	3	2	-	-
합 계	148	100	124	100

격이 강해졌으며, 이들은 아무런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수직적 성격은 하나의 「콤비나트」에 중간, 최종적 생산자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造船「콤비나트」에는 조선소, 선박엔진, 선박프로펠러 제조 등 모든 관련 생산업체들이 통합되어 있었다.

대부분 동독의 「콤비나트」는 수평적·수직적 생산통합 두가지 양상을 함께 갖고 있었다. 특히 수직적 생산통합에 있어서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로 인한 강박감 때문에 자금자족률을 과도하게 높였다.

또한 대부분의 「콤비나트」는 生産統合의 完全化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품, 회사규모 등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기능과 중앙에서 추가적으로 지시하는 소비재생산기능 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기능들은 생산과 판매량에 별다른 효율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비율은 괄목

할 만한 정도였다. 「콤비나트」의 연구·개발 종사인력의 평균숫자는 625명이었고 이 중 365명은 대학졸업자, 260명은 전문학교 출신이었다. 전체 「콤비나트」의 연구·개발인력은 12,000여명으로 이는 구동독 총 연구·개발인력의 62%에 해당된다.

「콤비나트」의 또 다른 특징은 동독지역의 남쪽 지방 (드레스덴州, 튜링엔州)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어떤 지역에는 몇개의 「콤비나트」가 줄을 지어 위치하고 있기도 했다. 그결과 東獨은 重化學工業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地下 3~5m까지의 토양이 완전히 오염되는 심각한 공해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공해문제의 전형적인 例가 「비터펠드(Bitterfeld)」로서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公害가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여하튼 이러한 東獨經濟가 1990년 7월 1일 통화통합·경제통합이 실시됐을 때, 西獨企業과 경쟁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독의 생산성

은 평균적으로 서독 생산성의 50% 이하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25% 이하에 불과하다.

동서독간 생산성 격차 (서독=100)

산 업 분 야	동독의 생산성
에너지·석탄산업분야	48
고무·플라스틱·화학제품분야	50
금속생산·가공분야	47
기계·수송장비분야	56
전자공학·정밀기계·광학분야	52
섬유분야	56
비내구성 생산분야	57
기초·기호식품 분야	43
전체산업	52

동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많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 ① 노후화된 기술, 생산시설, 장비
- ② 경영능력 부진
- ③ 자원 배분방법의 비합리성
- ④ 조달체제의 비효율성
- ⑤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⑥ 저조한 노동의욕

⑦ 숙련공 부족

⑧ 생산과 연결되는 연구·개발부족 등

이 중에서 어느 한가지 요인만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고 上記의 제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원인들은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 동독기업은 재건이 불가능하며 단지 소수의 생산업체만이 재생 가능한 실정이다.

東獨商品을 선호하는 東獨人은 거의 없으며 심지어는 東獨産 農産物까지도 東獨人들은 배척하고 있다. 그리고 동독산 제품을 조달해 왔던 東歐共產圈의 판매망도 완전히 마비상태로 들어감에 따라 많은 취업자가 失業者로 전락하고 말았다.

現在 東獨에서는 약 百만명의 完全失業者와 약 1백30만명의 시간단축 노동자를 포함해, 약 2백30만명의 失業者가 발생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다음표 참조)

한편, 약 8천여개의 동독 국영기업을 民營化하는 責任을 담당하고 있는 信託會社는 그동안 매각을 통해 약 3천여 기업이 民營化됐다고 發表하고 있다. 이렇게 매각되고 있는 企業體는 比較的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이 높고 생산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며, 公害가 적고 社會間接資本도 다소 良好한 狀態에 있는 것들이다.

독일의 노동시장 현황

	동 독			서 독		
	90년9월	91년8월	91년9월	90년9월	91년8월	91년9월
실업자(백만명)	1.73	1.67	1.61	0.45	1.06	1.03
실업자율(%)	6.6	5.6	5.4	5.0	12.1	11.7
단시간 노동자(100일)	85	130	132	1,730	1,451	1,333
취업할 수 있는 직장(1,000社)				24	44	43

信託會社는 그동안 「콤비나트」(一般的으로 연구개발부, 생산부, 판매유통부를 갖고 있다.)의 一部分인 연구개발부(R&D)를 분리해서 獨立會社로 만들었다. 이러한 會社를 「研究會社」라고 하

며 이러한 研究會社는 大部分 高級人力들이 집결해 있어 比較的 쉽게 매각되고 있다. 信託會社는 各 地方에 16個의 支社를 갖고 있으며, 각 지사는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産業政策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으나, 企業次元의 投資政策과 地域開發政策이 內容的으로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신탁회사는 매각촉진을 위해 외국기업에도 국영기업을 매각하고 있으며 특히 日本企業에 대해

신탁회사의 국영기업 민영화실태

○외국기업의 동등기업 매입

국 별	기업수(개)
프랑스	47
스위스	22
화란	20
벨기에	18
스웨덴	17
오스트리아	13

○지금까지 매각된 국영기업 : 3,400社

○현재 남아있는 국영기업 : 7,000社

서는 매각업무를 「노무라會社」에 맡기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영기업을 인수한 企業次元에서는 일단 너무나 많은 고용자가 會社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半 以上の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하나, 때로는 그간 설립되어 활발해진 勞組가 이에 대해 맹렬히 反對하기도 한다. 여하튼 信託會社가 앞으로 국영기업을 全部 民營化하기까지는 最小限 5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東獨經濟 재건에서 또다른 큰 문제는 資本主義 企業經營의 경험을 가진 경영인이 없다는 것이다. 「콤비나트」의 경영인은 大部分 공산당원, 국가안전부원, 혹은 소수의 엔지니어였다. 이러한 경영인들은 上命下達式의 命令만을 준수하는 의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市場經濟體制下에서의 경영인은 경영인으로서 가져야 할 경영지식과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창의성, 모험성,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기업내에서 최고위층 간부들은 西獨人이 (一定期間 동안) 주로 맡게

되겠지만 문제는 기업경영 결정 및 실행과정에서 필요한 中間層 경영인이 희소하다는 점이다. 물론 수많은 단기 경영연수과정에 東獨人들이 參加하고 있고 특히 종전에 여러 행정관청에서 일하던 능력있는 젊은 世代들이 이러한 경영연수과정에 많은 關心을 갖고 있으나, 능력있는 경영인 부족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統一過程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두말할 것 없이 ‘統一費用’이다. 물론 독일에서는 統一費用이라는 용어를 使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統一費用의 규모에 관해서 많은 論議가 있으나 독일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統一費用의 규모가 아니고 統一費用에 관하여 서독정치가들이 ‘事實과 다른 約束’을 했다는 점이었다. 즉 서독정치가들(특히 헬무트 콜 수상)은 1990년 12월 통일독일에서 처음 치뤄진 국회의원선거에서 “統一때문에 絶對로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으나(이에 反하여 야당인 社民黨은 반드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우리도 統一費用에 관한 논의를 좀더 다른 角度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統一費用은 얼마나 들 것으로 豫想됐었던가?

독일정부에서 생각한 통일비용을 ‘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으로 좁혀서 볼 때, 이에 책정된 年必要額은 1천5백억마르크(이하 DM [독일마르크화]으로 약칭함.)였다. 물론 이는 聯邦政府와 州政府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통일과 관련해서 여기에 追加되어야 할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및 연금	99억 DM
실업보험	2백67억 DM
지방자치단체 지원	3백58억 DM
통신 통합(Telekom)	55억 DM
개인투자	150~300억 DM
계	929억~1,079억 DM

따라서 약 1천억DM 이상이 追加的으로 필요하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 정부는 부채를

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동독의 GDP(국내총생산)를 3천억DM으로 계산할 때 조세수입은 불과 7백억DM에 불과한데 1996년까지는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또다른 追加支出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① 신탁회사지원 : 2000년까지 약 4천억DM
- ② 공해제거 : 약 10~15년간 200~300억DM
- ③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폐기물처리 :
5년간 60~70억DM
- ④ 국철지원 : 매년 80~90억DM
- ⑤ 수도이전 : 600~800억DM
- ⑥ 기타지원 : 50억DM

연방정부의 재무장관 바이겔은 이러한 재정지출요인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가 다음과 같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른다면 금년에 시행된 세금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1992	1993	1994
1,368억DM	1,512억DM	1,529억DM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조만간 또 한번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14%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獨逸國民들 사이에는 점차 통일비용에 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비용 때문에 독일경제가 위험에 빠질 것인가?’라는 설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보는 응답자가 今年 5월에는 66%이었으나 지금은 59%로 떨어졌다.

最近의 동독경제사정은 一般的으로 ‘豫想한 것보다 好轉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대표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당초 1991년 말까지 동독지역의 실업자와 단축노동자수가 4백만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2백30만 내지 3백만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들어 동독의 종전 對東歐 판매망이 復活되었고 一部企業은 莫大한 新投資 結果 製品 生産量이 급격히 증대하여 最近 東西獨地域의 무

역수지를 比較하면 東獨이 오히려 더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독지역도 동독재건에 필요한 수요증대에 힘입어 대단한 호경기를 나타내고 있다.(다음표 참조)

셋째, 수공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다. 東獨에서는 지금 곳곳에 많은 수공업계통의 中小企業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이는 동독지역에서도 시장경쟁원리가 점차 뿌리를 내리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사실상 東獨에는 2차대전 직후에도 수많은 中小企業이 存在하고

양독간의 교역(1991년 상반기)

구 분	西獨에서 東獨으로	東獨에서 西獨으로
계	200억DM(전년보다 144% 증가)	44억DM(전년보다 12%증가)
투자재	52%	20%
식료품	21%	14%
원자재·원료, 제조설비	15%	40%
소비재	8%	16%
농림·탄광산	3%	10%

있었으나 1950年代 後半부터 점차 加速화된 「콤비나트」화 과정에서 식당 등을 제외하고는 中小企業이 대부분 사라졌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독지역에는 1971년까지 제조업분야에 11,253개의 기업체가 있었으나, 1987년에 가면 다만 3,449개의 기업체만 남게 되었다.

구동독내에서 기업체수 발전 추이
(제조업, 1971~1987)

종업원수	1971	1987
25명 이하	3,864	131
26~ 50	2,559	186
51~100	1,812	343
101~200	1,147	519
201~500	845	861
501~ 1,000	405	558
1,001~ 2,500	406	540
2,501~ 5,000	133	215
5,000~10,000	62	75
10,000~20,000	15	21
20,000명 이상	5	—

동독은 1970년대 초기에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국유화하고 체계적으로 없애 버렸다. 즉, 중소기업이 없는 「콤비나트」 중심의 사회주의경제체제로 확립된 것이며, 이는 결국 경제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 ‘革新’을 없앤 결과가 되었다.

동독지역의 1990년 사회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고용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국영기업 종사자는 8백만명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나 민영수공업분야 종사자는 불과 30만명 이하이다.

동독의 고용구조

분 야 별	고용인 수
사회주의 국영 기업	8,075,155
민영 수공업	266,237
기타 민영기업	82,446
교회 및 종교기관	41,741
자영업	15,772
개인가게	2,391
정부자본이 투입된 합작기업	1,492
상업대리인	48,072

넷째, 최근 東西獨人의 勞動意識에 관한 設問 調査를 보면 지금까지 ‘東獨人은 나태하고, 창의성이 없다.’고 생각해 온 것이 편견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동독인들은 上命下達式 命令體制속에서 ‘강제근로’만을 수행해 왔고, 個個人의 職業選擇도 任意로 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國家의 규범속에서 完全 해방되어 ‘경쟁’과 ‘사유재산’을 주축으로 하는 市場經濟人으로 습관화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統一以後 一年이 지난 오늘날 社會科學者들은 ‘나태한 면에서는 西獨人이 더하다’는 결과를 찾아냈다.

다섯째, 다음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 7~9월을 기준(=100)으로 할 때 동독지역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침체되어 있으나 一部分野에서는 이미 호전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위 표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原油加工分野는 약간의 회복기미를 보이고 특히 인쇄·복사분야는 대단한 호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철강 및

東獨지역의 제조업 발전추이
(1990년 7월~9월 수준=100)

구 분	1991년 1월	1991년 6월
제조업(전체)	65.6	63.2
(1) 원자재 및 생산재 산업	71.1	67.1
(원유가공)	(111.0)	(107.6)
(2) 투자재 생산산업	53.9	52.8
(철강·경금속)	(67.4)	(89.4)
(3) 소비자재 생산산업	74.2	71.1
(인쇄 및 복사)	(81.1)	(111.9)
(4) 식료품	99.9	94.0

경금속분야에서도 급격한 침체현상은 일단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철강·경금속분야와 기계산업분야가 향후 동독지역에 가장 유망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다음 表 참조)

흥미있는 事實은 外國으로부터의 주문이 금년 들어와 154.1 수준까지 增加했다가 지금은 94.6으로 정상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섬유산업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동독지역의 산업별 수주(1991년 6월)

(1990년후반수준=100)

제조업 총계	75.3
국내수주	68.8
국외수주	94.6
(1) 원자재 및 생산재	59.7
(2) 투자재 생산산업	92.4
(철강·경금속)	(170.4)
(기계산업)	(118.4)
(3) 소비재 생산산업	62.2
(인쇄·복사)	(92.6)
(섬유)	(85.9)

일곱째, 東獨企業들이 自己 스스로 어느 정도 技術競爭力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독기업중 이미 경쟁력이 있다는 企業이 10%이며, 70%의 企業도 또 1~2년 사이에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判斷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지금까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문제는 ‘재산권처리’이다. ‘배상원칙’ 혹은 ‘보상원칙’을 택하느냐에 대해서

동독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自己判斷

구 분	(%)
2년內에는 경쟁력이 있다	44
1년 “	30
2년이상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	9
시기를 말할 수 없다	2
아마 경쟁력을 앞으로 가질 수 없을 것이다	3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2
이미 경쟁력이 있다	10

의견이 상치하고 있으며, 신탁회사가 관할하는 국영기업재산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분단이전 個人所有의 住宅·土地 등의 재산권처리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長期間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서독기업의 對동독투자 현황을 살펴보자.

연방정부는 서독기업이 동독지방에 투자하는데 대해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과기처장관은 특별 보조프로그램을 통해 서독기

업의 연구·개발투자의 5%를 동독지방에 투자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對동독투자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독과학자들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서독기업이 對동독투자를 기대한 만큼 시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상업 및 서비스분야에 집중되어 제조업분야 투자가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1991년 2월 통계에 의하면 서독의 對동독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독의 대동독 투자(1991년 2월)

분	야	투자액(100억DM)
제	조	100
우	편	65
철	도	20
에	너	25
상	업	5
은	행 · 보	5
협	험	
계		220

현재 신탁회사는 약 3,000개의 회사를 민영화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분야중 자동차 산업만 비교적 서독기업이 흥미를 보여주고 있을 뿐 화학, 전자, 철강, 섬유, 시멘트, 제지 등의 분야에서의 투자는 대단히 저조하다. 다만 상업, 은행, 보험 등의 서비스 분야에는 서독 기업이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서독기업(나아가서는 서구기업)이 對동독투자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90년 4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계속해서 서독기업의 對동독투자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동독 기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동독기업 경영인들의 의견
(동독 5개주 202명의 경영인에게 질문)

(단위 : %)

대동독투자부진사유	1990			1991	
	4월	6월	9월	1월	4월
관료적인 수속절차	50	32	40	58	51
자본부족	35	63	73	74	64
노동자의 비관적 태도	32	52	59	85	69

같다.

이 표를 보면 독일통일을 전후해서는 자본부족과 노동자들의 비관적 태도가 對동독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991년 4월에 들어오면 그러한 문제들은 중요성을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서독 또는 서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동독의 「콤비나트」 별로 技術工團을 설치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콤비나트」의 기술잠재력을 이용하여 기술공단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예는 예나(Jena)이다. 예나는 전통적인 「칼 짜이즈」회사의 본거지로 많은 高級人力이 이곳에 축적되어 있다. 「콤비나트」인 「칼 짜이즈」사는 이를 활용해서 각 부분별로 獨立會社를 설립해 서독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이러한 시도는 성공을 거두어 많은 소규모의 기술집약적 기업체가 「칼 짜이즈」 기술공단에 입주했다. 이에 힘입어 현재 구동독 지방에는 첨단

기술과 재래기술을 접목하는 여러 형태의 응용연구 기업체가 생기고 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고급인력의 집결지인 베를린지역을 제외하고는 서독 대기업은 동독의 인력을 위주로 하는 거대한 研究·開發投資는 꺼릴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동독 각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고급인력과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1년 8월 연방 과기처장관은 「기술공단 프로그램」과 「기술집약적 기업 설립촉진 프로그램」(TOU)의 實績評價를 했다. 이에 의하면 1991년 중반까지 333건의 TOU 신청이 있었는데 상당한 수의 프로젝트가 政府支援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으며, 신설 기업의 중점분야가 대부분 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 센서기술, 의학기술, 소프트웨어, 공해방지기술 등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 社會的 次元

독일통일 과정에서 자주 쓰여진 用語가 있다. ‘政治的 次元’과 ‘社會的 次元’이라는 두 用語이다. 콜 수상이 政治的, 制度的, 法的 次元에서 일단 統一을 성취하는 ‘政治的 統一’을 추구한데 대해 콜 수상에 대한 도전자로서 등장한 社民黨의 라폰텐은 ‘政治的 統一’은 물론이지만 ‘社會的 統一’도 함께 追求해야 한다고 나섰다. 社會的 統一이라는 用語의 내용은 東·西獨人間에 소득·임금차에 의한 一·二等國民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獨逸統一 以後 남아 있는 과제는 ‘社會的 統一’을 實現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모든 독일국민은 異論이 없었다.

社會的 統一 構想의 始發點은 東獨人이 西獨物質文明을 선망하여 너나없이 東獨을 버리고 西獨으로 移住한다면 東獨에서는 空洞化現象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迅速히 東·西間에 均等한 경제생활수준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的 統一의 意味는 통일이후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擴大됐다. 우선 東獨人이 西獨人의 임금 또는 봉급의 60%밖에 받을 수 없다는 事實은 통일독일속에 이미 一·二等國民이 存在함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東獨經濟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未洽하기 때문에 東獨의 임금·봉급수준을 서독과 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當然하다고 보고 있으나 一部 社民黨의 지도자와 노조는 賃金과 所得隔差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隔差를 없앨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동독의 임금수준이 西獨水準의 60%인 상황에서도 점차적으로 西獨과 平均화하려는 계획(1995년까지는 東·西獨間에 賃金隔差는 없어진다.)때문에 東獨에 投資하려는 西歐企業인들이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企業人の 立場에서는 동독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1995년까지 東西獨의 賃金水準을 平準化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여하

튼 社會的 統一의 의미는 이와 같은 경제적, 물질적 방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社會的 不平等이 東·西獨間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독지역내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독지역내에 社會的 不平等이 存在한다는 것은 社會主義社會의 역설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과거 동독지역내에서 공산당 당원, 국가안전부 관리, 비밀경찰 등은 절대적인 特權層이었다. 그들은 外貨를 소지했고, 따라서 마음대로 外國旅行도 할 수 있었으며, 居住地는 보통 일반주택가와 격리되어 있는 특별구역이었다. 동독지역에서 이러한 地域으로 이름난 곳이 「반드릿쓰」(Wandlitz)였고, 가장 빈곤한 노동자의 居住地가 「프렌즈라우」(Prenzlauer)였다. 前者는 社會主義社會의 平等思想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으로 이곳에는 西獨의 부유층이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여 호화주택, 고급승용차, 슈퍼마켓 등이 存在했다. 統一以後 이곳은 東·西獨人에게 관광의

대상이 되었으며 東獨人 自身이 이와 같은 곳이 과연 東獨內에 있었는지를 의심할 정도였다.

이와 함께 공산당·국가안전부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던 學者·藝術人·經營人·勞組幹部들도 윤택한 生活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從事하는 機關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승진이 빨랐다. 學界의 例를 보면 M·L(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르치는 教授들은 特別한 類의 學者로서 대우를 받았으며, M·L科目은 어느 分野에서도 필수과목이었다.

그리고 人文·社會系 教授中에는 教授資格試驗을 통과하지 않고, 물론 공개채용원칙도 전혀 모르며 上部指示에 따라 資格도 없는 學者가 어떠한 科目을 가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울러 大學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나 응모에 의한 것이 아니고 國家의 면밀한 計劃에 의하여 大學入學許可를 받고 지원학과와는 다른 科目을 수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동독학생중에서 엄선된 모스크바 유학생은 實力뿐만 아니라, 家庭背景, 思想面에서 完全해야 했다.

舊東獨의 特權層은 통일이후 一部 해고되어 失業者가 됐지만 대부분 다시 현 동독지역에서 特權層으로 재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구동독지역의 기업체 경영인과 行政官廳의 官吏들이다. 또한 信託會社의 고급간부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舊東獨에서 활약했던 공산당원 내지 국가안전부 직원이거나 동조자였다. 물론 그들의 舊東獨時節 行蹟이 폭로되면서 해고 되거나 自進辭退하는 일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전 경영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한 이들은 폐쇄된 ‘聖域’을 만들어 상호 보호하는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부터 붕괴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이처럼 구동독시절의 특권층이 통일이후에도 계속 특권층으로 활약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구동독기업을 민영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統一以後 많은 失業者가 생겨 一部는 自殺을

시도하기도 하고, 一部는 알콜中毒者가 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심각한 문제중 하나가 女性問題이다.

동독지역의 여성취업률은 西獨보다 훨씬 높았다. 그 배경은 구동독지역의 女性들에 대한 직업전문교육이 西獨보다 앞서고 있었고 西獨처럼 男性職業, 女性職業이라는 區別없이 직업선택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탁아소, 유치원제도가 어디서나 철저히 실시되고 있었고(地方自治團體 次元에서), 工場의 경우에도 工場內에 반드시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통일이후 구동독지역의 地方自治團體가 財政的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유치원이 폐쇄되고 국영기업내 시설도 會社自體의 不況 내지 破産으로 거의 문을 닫게 됐다. 그결과 東獨女性들은 취업보다 家事와 子女養育에 치중하게 됐으며 이러한 변화를 독일에서 ‘東獨女性의 西獨化’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상 통일이후 東獨家庭은 한사람의 소득만으로 生活하기가 困難한 상황이다. 동독출신 근

로자는 同等한 職種에서 근무하는 西獨人賃金の 60%만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부가 함께 실직을 하게 된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독근로자들이 生計維持를 위해 지금까지의 資格과 適性에 全然 맞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서독지역에 파출부, 청소부, 건설노동자 등의 형태로 나가고 있으며, 西獨과의 境界地方이나 서베를린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통근하는 경우도 많다. 現在 통계상에 나타나고 있는 通勤勞動者는 약 34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하여 급속하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은닉되어 있는 숫자까지 가산한다면 現在 약 50만명의 통근노동자가 있다고 보면 된다.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큰 社會的인 문제는 동·서독간의 「낙태법」 조정문제이다. 서독에서는 原則적으로 낙태를 하면 刑法 218조에 위반되나, 동독지역에서는 임신 일정기간내 임신부 자신의 결정에 의해 낙태시킬 수 있었다. 서독에서는 임신부의 社會적, 가정적, 심리적,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낙태를 허가하고 있다. 독일의 女性들은 東獨의 경우가 진보적이며 女性의 事情을 고려한다는 立場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자민당(FDP)과 사민당(SPD)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은 西獨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東·西獨 統一 以前에 두 모델을 놓고 맹렬한 討論이 벌어져 일단은 앞으로 3年동안 동서독지역에서 상이한 낙태법을 適用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절충을 봤으나, 지금까지도 낙태문제에 있어서는 시원한 方途를 찾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며, 대체적인 여론은 결국 西獨이 東獨모델을 따라가게 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라. 文化 및 民族意識的 次元

統一이 독일에서 성취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게르만民族은 다르다.”였다. 즉 독일인의 民族性이 뛰어나고 一致團結하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統一이 可能했다고

보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그런데 興味있는 사실은 1956년부터 始作된 독일의 통일정책속에서 “獨逸民族은 統一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한 예가 아주 드물다는 점이다. 만약 독일민족이 統一을 앞세웠더라면 주변국가와 4大 戰勝國이 절대 이를 許容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2차대전을 발발시켰으며, 이 戰爭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게르만民族의 우월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國際的 與件을 감안하여 서독은 ‘統一’보다 東西獨의 ‘相互接近’을 強調했으며, 接近을 통해 兩獨이 平和롭게 共存友好關係를 맺는 것을 目標로 추구해 왔다.

1970年代 初부터 브란트의 東方政策推進으로 동서독간의 왕래가 빈번해 짐에 따라 많은 西獨인들이 東獨을 방문하고 一部 고령자 東獨인도 西獨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왕래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인은 相互間에 모든 점에서 이질화되어 있었다는 事實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東獨의 장벽이 없어지고 동서독지역 주민

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게 됨으로써 東西獨人들은 사실상 다른 두 民族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西獨人들은 오히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서구인과 더욱 同質性을 느끼고 있으며 東獨人에 대해서는 ‘독일말(또는 이상한 독일말)을 하는 異質民族’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東獨人들은 40년간 통제와 감시, 굴욕과 긴장 속에서 아주 制限된 범위의 自己生活哲學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東獨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을 소비하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外面에 나타나는 모든 行爲와 表現方法, 內容, 심지어는 피부색, 옷차림까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의 自負心을 갖고 있다. 그것은 東獨인들이 무혈혁명을 통하여 독일통일을 實現했다는 점이다. 1990년초 東獨人들은 통일독일에 東獨 固有의 것으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논쟁을 전개했다. 너무나 급한 속도로 통일이 실현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결론은 통일독일에 가져갈 ‘동독의 고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과연 東獨人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마즈(Maaz) 박사(동독의 정신과의사)는 그동안 두 권의 冊을 出版했다. 하나는 「感情停滯」이고, 다른 하나는 「몰락된 민족」이다. 最近에 出版된 「몰락된 민족」의 內容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마즈 박사는 전후 40년간 소련의 植民主義者가 東獨人을 支配했고 1989년 11월 以後에는 西獨人이 동독인을 支配하고 있기 때문에 ‘恥辱으로부터 恥辱으로’로 東獨人의 運命을 表現하면서 과연 이러한 統一이 필요했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感情停滯」는 마즈 박사가 東獨의 精神科 患者들과 接觸한 경험을 정리한 책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東獨人들은 自己感情을 全然 表現할 수 없고, 權威主義的이며, 非창조적이고, 非모험적이고, 非자발적이고, 命命에 가장 잘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個人이 가지고 있는 感情을 表現할 수 있는 餘有와 能力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成長한 東獨

人들은 統一以後 그들이 가장 희구해 오던 ‘旅行의 自由’(이를 政治的 自由라고 오해하고 있다.)와 비디오, 카메라, 칼러TV, 자동차로 압축되는 物質的 意味에서의 西獨에 대한 동경을 實現함으로써 ‘統一’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失業狀態만 해결된다면 東獨人이 생각하던 ‘完全한 統一’이 實現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反面에 西獨人은 ‘無能한 東獨人이 西獨人 때문에 生活할 수 있게 됐다.’는 心理的인 우월감을 갖고 東獨人들을 대단히 경시하고 있다. 몇 가지의 輿論調查結果를 통하여 東西獨의 異質性을 파악해 보자.

현재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진통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東西獨人의 意識的, 心理的, 行動

동독인은 통일독일에서 이등국민으로서 취급되는가?

	1990년 가을	1991년 중반
그렇다	75	84
그렇지 않다	15	9
모른다	8	7

的 갭(gap)이다. 서독인은 동독인을 ‘노동하지 않고 생을 즐기려는 사람들’, 동독인은 서독인을 ‘동독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東獨人과 西獨人은 경제생활수준의 격차에서 오는 의식차이때문에 상호간에 ‘독일민족’에 관한 편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독인들은 동독인을 다만 39%만이 二等國民으로 생각하나 대다수의 동독인들은 자신들이 이등국민으로 취급받는다 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여하튼 동독인과 서독인 사이에는 상당히 심한 ‘벽’이 생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마음의 벽’은 다음 표에서 더욱 확실히 찾아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동독인들의 반응

○서독은 동독을 제국주의식으로 정복했다.	63%
○서독인은 부유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뉘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64%
○서독은 동독을 단지 판매시장으로 본다.	92%
○많은 서독인은 동독인보다 더욱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82%

東獨人은 일반적으로 西獨人들과 융화되지 않고 다만 ‘얼어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서독인과 의견교환 등의 接觸을 가급적이면 회피하고 있다.

이처럼 兩獨住民들간에 심각한 상태로 存在하고 있는 생활관·의식상태의 갭(gap)이 지금 여러 形態로 발산되고 있다. 現在 동독지역에서 심해지고 있는 極右派의 外國人에 대한 공격이 좋은 一例가 될 수 있다. 또다른 예는 東獨人의 투표행위이다. 東獨人들은 그들이 바라는 ‘物質的統一’을 가장 빨리, 쉽게 實現할 수 있는 政黨에게(맹목적으로) 투표했다. 이것이 바로 서독의 여당이었던 기민당(CDU)이었으며, 그 결과 사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기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日常生活에 돌아왔을 때 기대했던 기민당의 約束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거품과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자 기민당 반대시위가 東獨 各地에서 일어났고 콜 수상은 ‘사기꾼’으로 낙인찍혔다. 政治文化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東獨에 이러한 政治行爲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지적해야 할 사실은 統一實現에 뒷받침이 되었던 東獨 無血革命의 主人公들인 宗教人, 文藝人들이 정치의 뒤에 처져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東獨 공산정권반대에 가장 先頭에 섰던 사람들이었으나 政治活動이 組織化되는 과정에서 방관하다가 가장 뒤늦게 政治活動에 가담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무혈혁명의 主人公들이 처음부터 東獨政治文化 구축에 뛰어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많은 東獨人은 아쉬워하고 있다. 물론 이런 아쉬움은 東獨의 政治文化가 西獨政黨들의 과열경쟁때문에 싹도 트기 전에 너무나 빨리 바람직하지 않은 方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東獨에서 문화예술인들의 活動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非政治化되고 많은 文藝人들이 은둔생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 教育 및 研究的 次元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以後 몇 명의 동독학생들이 筆者의 강의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東베를린 훔볼트大 경제학부 강의중 「社會主義企業理論」이라는 강좌가 갑자기 「市場經濟에서의 마케팅」으로 변경됐고 가르치는 교수는 같은 사람이나 일주일 사이에 講義內容을 급히 바꿨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연하기를 “講義內容은 어느 교과서를 그냥 暗記한 것 같고 아무런 現實感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털어 냈다.

통일이후 人文社會系 교수들은 그들의 교과내용을 급히 바뀌어야 했고, 종전에는 거의 강단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으나, 이제는 매주 8시간씩 반드시 강의를 하게 됐다.

동독지역에서 대단히 빠른 速度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教育제도와 教育시설, 인력 등의 신설과 확충이다. 독일의 教育제도는 州政府次元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권한은 조정기능

뿐이다.

교육제도 개혁중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구동독의 교육제도를 서독제도로 개편하는 作業이다. 이 作業에서 重要的 것은 學校施設面에서 뿐만 아니라 교과내용의 혁신적 개편과 교수 및 교수들의 起用問題이다. 학교시설과 교과내용의 개편은 西獨의 예를 고려해서 比較的 쉽게 추진할 수 있으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교과서내용에 맞는 교사·교수의 採用이다.

우선 大學의 예를 들어 說明해 보자. 과거 동독의 대학이 中央集權的 文教行政 管轄下에 있었던 것을 통일이 되면서 각 연방주의 소관으로 移轉시켰다. 同時에 많은 전문대학(경제, 예술, 광산 등)을 專門短期大學 次元으로 조정했으며 224 個 程度의 綜合大學을 존속시켰다. 그리고 各州는 기존대학의 부활 또는 새로운 대학설치와 관련해서 반드시 西獨學者에게 총장이나 학장을 맡기고 새로운 대학사무를 시행하게 하고 있다. 同時에 종전의 교수들을 일단 시한부 契約으로 채용해서 그들의 政治活動과 학문적 능력에 관한

심사과정을 거쳐 아무런 政治的 혐의가 없다면, 能力이 인정됐을 때 새로운 就業契約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심사과정에서 두가지 기준중 하나의 기준만이라도 不合格되었을 경우는 곧바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러한 심사를 독일에서는 ‘처리’(Abwickluug)라고 부르며 現在 수많은 학자가 이미 ‘처리’되어 失業상태에 들어갔고 특히 M·L(마르크스·레닌주의)과목을 가르치던 교수들은 가장 먼저 ‘처리’됐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극비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構成員을 통해 어떻게 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困難하다.

原則적으로 舊東獨地域의 大學에서는 모든 教授職을 新規採用하고 있다. 教授職에 응모할 사람은 반드시 교수자격시험을 거친 사람이라야 하며, 반드시 공개채용방법에 따라 공청회를 포함하는 모든 심사과정이 끝나고 심사위원회에서 作成된 순위표가 州政府에 올려지면 최종적으로 州政府에서 적격한 교수를 부른다. 現在 독일의 주간지인 「디 짜이트」를 보면 東獨大學들은 경쟁적

으로 교수채용 公開募集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東獨에서는 극히 少數의 교수들만이 교수자격 시험을 거쳤기때문에 大部分의 학자와 교수들은 공개채용 응모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

舊東獨地域에서 大學教育再建과 관련하여 서독에서도 실시되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교과과정이 생기고 있다. 예를들면 「캠닛단」공과대학의 法經濟學部에 技術法學科가 신설되었으며, 「콧트부스」공과대학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반드시 人文社會系 科目을 선택과목으로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와 국민학교의 개편은 대학교육의 쇄신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다. 중요한 이유를 들자면;

○교사들의 大部分이 열렬한 공산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대책이 없다.(물론 과격하게 「드래스덴주」와 같이 1만명의 교사들을 해고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시설을 전반적으로 쇄신해야 하나 여기에는 莫大한 재원이 필요하다.

○교과내용도 전반적으로 쇄신하여 서독의 교과내용으로 개편해야 하나 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매우 희소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教育統合의 經過를 종합해서 보면,

○教師들의 재교육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러시아어 교사들은 영어교사로 전향하기 위한 속성어학연수를 받고 있으며 사회·역사교사들은 서독인교사, 대학교수, 혹은 서독대학생들의 지도를 받거나 서독에 가서 ‘실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종전의 이념교육선생은 거의 例外없이 해고당했다.

○教材는 이미 점차적으로 서독교재가 투입되고 있다.

○學校施設은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실험실 투자지원이 급선무이다.

동독지역의 各연방주는 경쟁적으로 서독의 학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체로 1992년부터는 서독교육제도(제도면에서만!)가 동독에 전반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科學技術 統合을 위한 정책은 최고학술심

의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

統一條約 제38조는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現實의 充實化’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12월 말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잡고 전 독일연구체제 구축을 위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聯邦 科技處는 최고학술심의위원회(Wissenschaftsrat)가 동독대학의 연구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學術院研究所를 大學研究所로 轉向시킬 것인가?

○聯邦州 차원에서 연구소를 신설할 것인가?

○일부 연구소를 독일 基本法 제91조에 의하여 「聯邦·州 - 共同財政支援制」속으로 넣을 것인가?

예를 들면 「막스 플랑크」 연구소, 「푸라운로 퍼」 연구소 등이 그 대상이다.

○재래의 재정지원제도에서 격리시켜 獨立研究

經營會社로 만들 것인가?

최고학술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구체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임무는 「聯邦·州－共同委員會」(Bund·Länder-Kommission)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은 基本法 제91조에 따른 모든 결정과 조치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 위원회는 1개의 評價委員會와 7개의 專門委員會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독 연구기관을 평가할 때는 7개의 전문위원회중 1개의 전문위원회가 반드시 참가해서 東獨 研究機關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다. 그리고 7개의 전문위원회 이외에 2개의 다른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은 건설아카데미와 농학아카데미를 평가했다. 각 위원회의 評價委員들은 동서독 출신의 학자들과 유럽국가들의 학자들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위원은 전부 150명이다. 평가대상 연구소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독일정부 대표 1인과 해당 연방 주정부 대표 1인이 참가했다.

최고학술심의위원회의 평가작업은 예상보다 반년 일찍 끝났다.

評價報告書는 總論과 各論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부분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科學技術統合을 위한 구동독 대학외의 연구기관의 재편성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大學外 연구기관과 大學內 연구기관과의 관계, 技術工團의 조직과 기능, 신설 연구기관 설립지원과 연구인력 확보문제 등이다.

이와 함께 ‘연구와 교육의 일치’(Einheit von Forschung und Lehre)에서 출발하는 西獨 고등교육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東獨地域에서는 이러한 ‘一致’가 1988년 3차 대학개혁이후 사라지고 말았다.

統一獨逸에서는 대학간의 경쟁, 대학외 및 대학내 연구소간의 경쟁, 연구소 관할에 있어서 多元性, 연구지원의 多元性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대학내 연구소간의 밀접한 協力關係는 필수적이라고 보며 대학연구소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州政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大學과 大學外 연구소간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연구소의 교수들로 하여금 西獨에서와 같이 반드시 학생교육 및 지도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상호간에 共同科目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독지방의 연구소가 특수지역이나 工團 등에 집결해 있는 대학 및 대학외 연구소로 구성되는 「科學公園」(Wissenschaftspark)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학공원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응용연구를 추진하여 명실공히 ‘産學協同의 原產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관의 모든 직원은 공개채용 되어야 하며, 신설 연구소의 기관장은 가능한 한 東獨出身 학자를 기용하고 젊은 연구원들의 고용계약은 반드시 時限制로 해서 경쟁심을 유발해야 한다. 이와함께 1992년부터 장학금제도 및 프로젝트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지금까지 외국학문을 접촉할 수 없었던 東獨 소장학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

이상이 最高學術審議委員會 평가보고서의 요지

이며 聯邦과 各 州政府은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 연구분야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중에서 과거 東獨 學術院의 연구가들이 대학연구소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大學의 學生數 對 大學教授 數는 동독지역이 대단히 유리한 편으로 교수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學術院 연구가에 대한 大學研究所, 大學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통일 이전에 학술원 연구가들은 소위 말하는 ‘귀족급 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東獨地域의 5개 新 聯邦州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이같은 과도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방과 주정부는 공동으로 「大學再建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1992~1994년간 5억DM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舊東獨 연구소 지도층들도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 당원이 아니면 국가안전부의 동조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요소 요소에 ‘잠복’하여 ‘새로운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大學 및 研究所의 모든 직원, 학자, 교수들은 과거 행적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으며 신규채용은 반드시 공개채용 방법으로 하고 있다.

産業研究 분야의 경우에 현재 동독지역 기업체의 연구·개발분야 종사인력은 86,0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주 적은 인원만이 계속 현직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독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市場經濟의 모체인 企業體의 연구·개발이 다시 활기를 띠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西獨企業 연구·개발투자의 5%를 東獨地域에 투자하라는 호소는 아직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나 통신·전자·마이크로시스템 정보처리, 레이저기술과 소재연구, 화학분야에 대해서

는 서독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산업분야의 연구개발에는 信託會社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1990년 8월에 聯邦 科技 處長官은 신용보증과 차관공여시 반드시 연구·개발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신탁회사에 종용했으며, 이에 따라 신탁회사는 그들이 관할하는 기업체의 연구개발분야 처리에 중점을 두고 민영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콤비나트」의 연구·개발조직은 「콤비나트」가 해체됨과 동시에 따로 독립된 「연구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이 研究株式會社는 현재 기업체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외부로부터의 委託事業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산업정책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연구주식회사의 문제는 聯邦 經濟省의 책임이다.

聯邦 科技處는 현재 프로젝트를 주어 研究株式會社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991년 8천만 DM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여하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것은 聯邦 科技處와 聯邦 經濟省이 공동으로 동독경제재

건과 研究·開發 지원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5. 韓半島 統一에 주는 示唆點

얼핏보면 韓半島의 統一條件에 있어서 外交的·國際的 與件은 대단히 유리한 것 같이 보인다.

전통적으로 韓·美관계는 원만한 상태를 유지해 왔고, 최근 通商摩擦에 의한 약간의 잡음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장래에 있어서도 韓·美관계는 통일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獨逸과 美國과의 관계처럼 돈독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韓·日관계는 經濟·技術交流 이외의 정신적·문화적 우호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日本은 항상 경제제일주의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내세우고 있는 이상 한반도 통일문제, 특히 北韓과

日本の 접근에 관해서 유심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日本의 입장에서 韓半島 統一은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韓國의 北方政策은 그간 결실을 가져와 韓·蘇 관계와 韓·中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1991년 南·北韓 UN동시가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사적·이념적으로 北韓과 가까웠던 中·蘇 양국이 통일이라는 과제를 목전에 두었을 때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미지수이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지나친 낙관적 견해를 갖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統一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의 초점은 무엇보다 우리 南韓의 통일준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통일 준비에 있어 고려할 몇가지 사항을 질문식으로 제기해 본다.

첫째, 南韓은 과연 北韓住民들이 선망할 수 있는 곳인가?

獨逸의 경험을 본다면 西獨의 ‘정치적 자유+칼러TV+비디오+자동차’가 동독인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즉, ‘물질문명’이 東獨住民들이 추구하는 욕구였으며,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에는 이미 통일 자체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은 쓰러진 동독을 다시 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貧富隔差가 없고, 환경보호가 잘 되어 있으며, 공개되어 있는 민주사회, 정치·경제·사회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는 西獨은 이제 동독주민들의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동독주민들은 다만 지금 그들의 ‘경제상태가 악화’된 것에서 統一의 意味와 現實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南韓의 立場은 어떠한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빈부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이며 제6공화국에 들어와 비로소 시작된 民主化는 현재 진행중에 있어 성숙한 민주주의가 南韓에 있다고 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衣·食·住 해결에 곤란을

겪고 있는 北韓住民들이 동독인들과 같은 요구를 해 올 때, 과연 우리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북한주민을 心理的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統一을 염원이나 구호차원에서 부르짖어온 것에서 탈피하여, 具體的이고 實踐的인 課題들을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둘째, 南·北韓 접근에는 連續性이 유지되어야 하며 통일정책은 각계각층의 參與와 合意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獨逸의 경험을 간추려 본다면 그들은 分斷과 동시에 경제교류를 시작했으며 東·西獨間의 거래를 ‘국제무역’이라고 칭하지 않고 ‘內獨貿易」(Einnerdeutscher Handel)’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1970년대초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의해 兩獨間의 교류는 경제분야외에 통신·문화·스포츠·예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72년의 基本條約 체결과 환경협정, 문화협정, 과학기술협정 체결로 말미암아 동·서독은 가일층 접근되었다.

이러한 동서독의 장구한 접근에는 政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회사, 개인 등 각 계층이 참여했으며 서독정부는 이러한 교류에 財政的인 支援을 담당했다.

南韓은 가능한 한 자신의 實情을 北韓住民들에게 알려, 그들의 南韓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해소시켜야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남한이 북한을 침범할 것이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다.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南韓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접근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政府의 前向的 措置와 支援政策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北韓의 실상에 관한 分析과 北韓住民에 관한 철저한 연구가 시급하다. 우리는 ‘한 民族이기 때문에 꼭 統一해야 한다.’고 한 獨逸人의 경우에도 표면적으로는 ‘한 민족’ 논리를 전개하

지 않았으나, 내면적으로 ‘게르만民族의 통일필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다. 그러나 獨逸의 統一 이후 발견된 사실은 독일내에 완전히 다른 두 독일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40년간의 獨裁體制에서 살아온 東獨人들은 가치관, 생활관, 모든 면에서 西獨人과는 상이한 성격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통일의 원동력으로 ‘게르만民族의 性格’을 강조했으나, 이는 낙관적인 文化主義的 見解에 불과하다.

통일 이후에 獨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진통은 ‘體制變革’에 따른 개개인의 ‘人間變革’에 따른 문제들이다. 동·서독인들이 동일한 생활관·가치관을 가진 民族으로 융합할 때까지는 2세대가 걸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現 南北關係 상황에서 北韓住民들이 어떠한 생활관,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하는 문제는 추측이 상을 넘어서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도 獨逸의 경험을 참고해서 지금까지의 北韓研究 接近方法을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체제가 우수

하다는 것을 주로 경제지표 비교에 의존하던 冷戰視角의 북한연구 접근을 이제는 止揚해야 한다.

부 록

동서독 통일과정 일지

가. 관계개선 주요일지

1969. 10. 28 Brandt 서독 수상,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독일문제에 관해 협상할 용의 선언
1969. 12. 17 Ulbricht 동독국가평의회 의장, 양독간의 관계수립을 위한 조약초안을 Heinemann 서독대통령에게 전달
1970. 1-2 Brandt 서독수상과 Stoph 동독수상간 양국수뇌회담에 관한 서한 교환
1970. 3. 19 양독수상, Erfurt(동독)에서 회합, 양측의 기본입장을 설명(제 1 차 동·서독 수뇌회담)
1970. 5. 양독수상, Kassel(서독)에서 회합, 양독관계 수립에 관한 조약내용 및 토의원칙에 관해 의견 교환(제 2 차 수뇌회담)
1970. 8. 12 독·소 불가침조약 체결
1970. 11. 27 서독수상실차관(Egon Bahr)과 동독국무차관(Michael Kohl)간 양독관계

- 에 관한 교섭 개시(이후 2년간 70여 회 회합결과 Transit Agreement, Transit Treaty를 거쳐 Basic Treaty에 이름)
1971. 9. 3 베를린의 지위에 관한 4대국협정 (미·영·불·소) 서명
1971. 9. 30 양독간 베를린 통과협정 체결(4대국 협정에 기초)
1972. 5. 2 양독간 통행협정 체결
1972. 8. 9 서독정부, Bahr 차관에게 기본조약교섭위임, 교섭 개시
1972. 11. 2 기본조약 가서명(Bonn)
1972. 12. 21 기본조약 서명(동베를린)
서명자 : 서독 - Egon Bahr 수상실차관
동독 - Micheal Kohl 국무차관
1973. 6. 21 기본조약 발효
1973. 9. 18 양독, 유엔 동시가입(제28차 유엔총회)
1974. 3. 동·서독 상주대표부 설치에 대한 의정서 교환(74. 6. 20 설치)

1978. 11. 29 동·서독 국경에 관한 조사, 개정 및
보완의정서 서명
1979. 10. 31 동·서독 자유통행협정 체결
1980. 10. 13 동독측 인적교류 제한조치
1981. 12. 11 제 3 차 동·서독 정상회담(슈미트 수
~13 상은 Honecker 서기장에게 서독 방문
초청)
1982. 11. 14 Karstens 서독대통령, 호네커 동독서기
장 회담(브레즈네프 장례식참석시)
1983. 4. 25 동독, 호네커서기장의 서독 방문계획
취소 발표
1983. 7. 24 서독은행, 동독에 10억마르크(4억불
상당) 차관 제공
1983. 7. 24 Strauss 기사당 당수 동독 방문, 호네
커 서기장 면담
1983. 9. 동독, 인적교류 제한조치 일부 완화
1984. 2. 14 양독수뇌회담(안드로포프 장례식 참
석시)(Kohl 수상은 호네커서기장에
서독방문 초청)
1984. 7. 25 서독, 동독에 9억5천만마르크(3.3억

불 상당)의 차관 제공

1984. 9. 4 동독, 호네커서기장의 서독방문 취소 발표
1985. 3. 12 양독수뇌회담(체르넨코 장례식참석시)
1985. 7. 5 동·서독 경제협정 체결
1985. 8. 14 동·서독 고속도로 보수협정 체결
1985. 9. 18 브란트 사민당 당수 동독방문, 호네
~20 커서기장 면담
1986. 5. 6 동·서독 문화협정 체결
1986. 9. 7 호네커 동독서기장 서독방문(과학·
~11 기술협력협정, 환경보호협정, 방사능
보호 및 원자로 안전협정 등 3개협정
체결)
1986. 1. 14 동·서독간 전력공급 협약 체결
1989. 8. 3 동·서독간 정기 항공노선 개설

나. 통일과정 주요일지

〈1989년〉

- 1~4월 :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에 동독을 탈출하려는 동독민 20여명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헝가리, 체코 등 제 3국으로 몰려듬.
- 5.2 :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 장애물 철거, 개방된 국경을 탈출구로 착안,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탈출 시작
- 5.7 : 동독 지방자치선거 부정 규탄시위 발생 (라이프치히)
- 5.23 : 서독 건국 48주년 기념일
- 6.6 : 서독정부, 동독피난민과 동구정착민 대상 정착안정금 지불 결정
- 6.12 : 소련 고르바초프 서독 방문, 독·소 공동성명 발표 및 11개 협정 체결
- 7.16 : 약 30여명의 동독민이 부다페스트 서독 대사관으로 피신
- 8.1 :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봉쇄 철폐선언,

동독피난민 급증

- 8.19 : 동서독 장벽설치 이후 최대규모(약 99명)의 피난민이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을 통과, 서독으로 탈출
- 9.10 : 헝가리, 동독간에 체결된 제3국 출국제한조약(1969년)의 효력정지. 동독내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개혁을 주장하는 신광장(Neues Forum)이 창립
- 10.4 : 체코, 특별열차편으로 동독민 1,500여명에 대해 서독으로의 출국 허용. 동독, 체코로의 자유여행 제한조치
- 10.7 : 동독 정권수립 40주년. 소련 고르바초프 동독 방문
- 10.18 : 동독, 호네커서기장 사임, 크렌츠 신임서기장 선출
- 10.19 : 서독, 동독에게 경제원조제공 용의 표명
- 10.23 : 동독, 라이프치히 시위(30만명)
- 10.25 : 동독, 드레스덴 시위(10만명)
- 10.26 : 콜-크렌츠 통화, 서독정부가 동독시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

- 10.27 : 동독, 난민과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해
사면조치
- 10.29 : 동베를린, 2,000여명이 장벽사망자 추모
모임, 최초장벽철거 요구 시위
- 10.30 : 동독, 전역의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
동독노조, 노조운동의 전환을 공포
- 10.31 : 크렌츠서기장 소련 방문후 개혁 약속
- 11.3 : 프라하주재 서독대사관, 동독민 4,000여
명 육박
- 11.4 : 동베를린, 약 100만명이 동독의 개혁을
주장하는 최대규모 시위 발생. 동독 대
도시 대규모 시위 확산
- 11.5 : 서독정당, 동·서독 국경개방 요구
- 11.6 : 동독, 국외여행법안 발표
-제한없는 여행, 자유선거, 언론·출
판·집회의 자유, 야당의 허용, 국
가·경제·사회개혁 등을 요구하는 대
규모 시위 계속
- 11.7 : 동독, 정부 총사퇴, 중앙위원회 개편 및
크렌츠 피선

- 11.9 : 동독, 베를린장벽(국경)개방
 - 자유선거, 공산당의 정치권력독점 종식 등 추가개혁 요구시위 계속
 - 서독 수상실장관 및 각정당 대표, 성명발표
 - 소련, 동독의 개혁을 환영
 - 서독, 최초로 동독난민 정착운동이 일기시작
- 11.10 : 동독공산당, 광범한 개혁안 공포
 서독 콜수상, 폴란드 방문 중단하고 서베를린 환영대회 참석
- 11.13 : 동독개각, 개혁파 한스 모드로수상 지명
- 11.16 : 동베를린주재 서독상주대표부 업무재개
 서독여당, 동독정부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버리고 사회시장 경제도입을 경제원조 조건으로 주장
- 11.17 : 동독, 내각개편, 서독정부와 긴밀한 협력 강조
 동·서독 국경, 100만명의 동독여행자로 혼잡

- 11.18 : 서독 기업인, 대대적인 동독지원 촉구
- 11.19 : 서독 및 서베를린방문 동독인 250만명
돌파
- 11.20 : 서독 수상실장관, 동베를린 방문, 서독
의 대동독 원조 협의
-서독여행을 원하는 동독인 비자신청 1,
000만명 육박
-동독 고위층 호화생활이 공개
-라이프치히 10만명 시위, 자유선거 및
공산당 독점권 배제 요구
-서독, 합리적 교환조건과 함께 여행기
금 설정계획
- 11.21 : 동독, 경제자유화 정책 발표
- 11.22 : 서독 공산당, 원탁회의 제안 및 선거법
도달
- 11.24 : 동·서독 국경개방이후 동독 이주민수
46,000여명에 도달
- 11.27 : 라이프치히 월요시위 20만명
서독 연방하원의장, 동·서독 의회간 공
식관계 수립을 동독 선거후 주장

- 11.28 : 콜수상, 국가연합형태의 동서독 통일방안 발표(10개항)
- 12.1 : 동독헌법에서 공산당의 정치주도권 조항 삭제
- 12.3 : 동독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 총사퇴
크렌츠, 당서기장 및 국가평의회 의장직 사임
- 12.11 : 베를린분할 4개국 회담 개최(서베를린)
- 12.19 : 동서독 정상회담, 양독 “조약공동체”구성 공동선언
- 12.22 : 동독,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28년만에 개방

(1990년)

- 1.5 : 라이프치히(15만명) 등지에서 양독 통일 주장 대규모 시위 계속
- 1.28 : 동독 “원탁회의”, 3월18일 의회선거 3.18일로 결정
- 1.30 : 모드로수상, 모스크바 방문, 고르바초프

가 동독에 이의없음을 확인

- 2.1 : 모드로수상, “독일통일에의 길” 성명발표, 연방제에 입각한 계약공동체 성립이라는 4단계 통독안 제의
- 2.3 : 콜-모드로수상, 비공식 회담(파리)
- 2.10 : 콜수상, 소련 방문, 고르바초프와 회담
- 2.11 : NATO-바르샤바 회담(오타와), 양독의 자결권 인정
6개국 외무장관 회의, 6개국(“2+4”) 통독기구 설치
- 2.13 : 모드로수상, 서독 방문, 콜수상과 회담-통일통합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독, 동독지원 위해 57억 마르크 예산 증액
- 2.22 : 동독, 군통합 회담 제의
- 2.24 : 서독 콜수상, 미국 방문, 부시대통령과 회담
- 3.18 : 동독 총선 실시, 우파연합 압승
- 4.5 : 서독의회, 동서독 화폐·경제·사회 통합 방안 마련

- 4.7 : 동독의회, 기민당의 드 메지에르 수상
선출
- 4.23 : 쿨수상, 양독화폐 교환비율 1:1 원칙
결정
- 4.27 : 양독간 국방장관, 최초회담, 통일독일의
NOTO 가입 논의
- 5.5 : 동서독과 4대 전승국간의 제 1 차 “2 + 4
회담” 개최(본)
-독일 민족자결권을 인정
- 5.6 : 동독,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동
독 기민당 제 1 당으로 압승
- 5.16 : 서독, 1,150억마르크 “통일기금” 조성
착수
- 5.18 : 동서독, 제 1 차 “화폐·경제·사회 통합
에 관한 국가조약” 조인
- 6.19 : 동독의회, 탈사회주의 헌법 개정 의결
- 6.19 : 서독, 대소 50억 마르크 경제차관 제공
계획 발표
서독 국경 불가변성 인정 결의안 채택
- 6.22 : 제 2 차 “2 + 4 회담” 개최(동베를린)

- 소련, 통독후 연합군 단계적 철수 제안
- 6.25 :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 정상회담 개최(더블린)
 소련 개혁추진 지원을 위한 차관, 경제 원조 합의(약 15억불)
- 6.27 : 동독, 국경검문소 폐지, 완전 자유왕래 실현
- 7.1 : “통화·경제·사회 통합 국가조약” 발효 및 동서독 국경 완전철폐 발효
- 7.5 : NATO 정상회담(런던), 바르샤바조약기구간 냉전 종결 논의
- 7.6 : “통합조약”(제 2 차 동서독 국가조약)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동베를린)
- 7.10 : 선진7개국(G7) 정상회담 개최(휴스턴)
- 7.14 : 콜총리, 소련 방문, 고르바초프와 회담
 -통독의 NATO 잔류 수용, 동독주둔 소
 군 철수 3~4년으로 유예
- 7.17 : 제 3 차 “2 + 4회담” 개최(파리)
 -폴란드 외무장관 참석
 -평화조약 체결의 불필요성, 통독군의

NATO 잔류 결정, Oder-Neisse 국경선
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 7.22 : 동독의회 주편성(5개주)에 관한 법률 통과
- 8.10 : 통독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협상 타결
- 8.11 : 동·서독 자민당 통합
~12
- 8.17 : 독·소 외상회담(모스크바)
—양국 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약 협의(철
군비용 논의)
—“2 + 4”(모스크바)회담 준비
- 8.22 : 통독 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동독의회 비
준
- 8.23 : 동독의회 기본법 23조에 의한 서독편입
결의
서독의회 선거협약 비준
- 8.31 : 통합조약 협상 최종타결, 서명
- 9.12 : 제 4 차 “2 + 4회담”(모스크바)
—통독문제에 관한 최종합의서 채택
- 9.13 : 독·소간 선린우호와 협력에 관한 조약

체결

- 9.14 : 동·서독 노조통합
- 9.16 : 동·서베를린 사민당 통합
- 9.18 : 독·불 뮌헨 정상회담
-프랑스 주둔군 2년만에 절반으로 감축
-양국이 유럽통합의 중심이 될 것임을
다짐
- 9.20 : 동·서독 의회 통합조약 가결
- 9.21 : 서독 상원(Bundesrat) 통합조약 가결
- 9.24 :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동독군 탈퇴 서
명
- 9.25 : 동·서독 카톨릭 교회 통합
- 9.16 : 동·서독 사민당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28 개최
- 9.29 : 연방 헌법재판소 통독총선을 위한 선거
협약 위헌 판결
- 9.29 : 동독의회 연방의회 파견될 144명의 의원
확정
- 10.1 : 동·서독 기민당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2 개최

- 10.1 :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외상회의 개최
~2 회
- 10.3 : 독일 통일의 날 공식행사 개최

獨逸統一의 過程과 敎訓 (통일총서 / 20)

1992年 2月 20日 印刷

1992年 2月 25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踰2洞 山73-13

電話：901-7123~4

(통연 92-2-16)

